

# 새정부 경제정책방향

## -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-



**ahpek**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
Association of High Potential Enterprises of Korea

# 새정부 경제정책방향

## 정책방향

- **소득 주도 성장**: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, 사회안전망 확충, 인적자본 투자 확대
- **일자리 중심 경제**: 고용친화적 시스템 구축, 노동시장제도 관행 개선,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
- **공정 경제**: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, 기업 지배구조 개선,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
- **혁신 성장**: 중소기업 성장동력화, 4차 산업혁명 대응, 대외 개방·전략적 해외 진출

## 이행기반

리스크 관리 등 경제안정 + 정책 인프라 혁신

## ■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지원 ('17.9월,'18년예산안반영,기재부·고용부·중기부)

○ 영세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, 카드수수료 인하, 공정질서 확립 등

## ■ 실업안전망 강화 (고용부)

○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% 가입, 실업급여 보장성을 '22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

\* (1단계)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(50→60%) 및 지급기간 연장(8→9개월) 등 고용보험 관계법령 개정 추진('18년)

(2단계) 지급수준·기간 등의 대폭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('18년~)

## ■ 4차 산업혁명 대비 평생교육 시스템 혁신 ('18년~, 교육부·기재부·중기부)

○ 4차 산업혁명 대비 예산을 지속 확대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계약학과 지원 확대

### ■ ‘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’ 신설 (17.8월, 세법개정안반영, 기재부)

- \* (고용증대)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세액공제(최대 2년간) 신설  
(비정규직) 중소기업비정규직 →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세액공제대폭 확대  
(임금인상)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

### ■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 (17.12월, 산업부)

- 외투기업, 유턴기업, 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제도 통합
- \*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·입지·현금지원을 외투지원 수준으로 강화,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지원대상 확대,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외투기업 수준으로 지원 등

### ■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장 제도·관행 개선

-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,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
- 하청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도급인 임금지급 연대책임·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등
- 법정근로시간 단축(주당 68 → 52시간), 포괄임금제 규제 등 1,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
-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,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 강화 등

## ■ 청년·여성 등 성별·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

○ (청년)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상향(3→5%),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,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추진

\* (의무고용제) 민간부문도 청년 신규채용 권고, 인센티브 도입 방안 검토

(추가고용장려금) 청년 3명 정규직 채용시 1명분 임금지원('17년 3천명→'18년 2만명)

(청년내일채움공제) 지원대상 확대,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

○ (여성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,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등 경력단절 극복

\*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,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, 직장내 성차별 완화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노력 병행

## 3 공정 경제

### ■ 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집행 강화 (17년~)

- 대·중·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한 단체구성권 확산(가맹점법→대리점법)
  -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
  - 기술유흥, 부당단가 인하,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방안 마련
  -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선,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등 불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
- \*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운영: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, 전속고발권 폐지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

### ■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(17년 하반기, 법무부·공정위) 및 과징금 상향 (18년, 법무부·공정위)

## 3 공정 경제

### 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

- 일감몰아주기 규제·과세 강화,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등
- 소액주주 경영권 견제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, 전자투표제도 도입,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
- 연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산으로 기관투자자 역할 제고 (17.10월,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 반영, 기재부)

### ■ 동반성장 촉진 및 골목상권 보호 강화

- “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” 신설 (17.8월, 세법개정안 반영, 기재부)
  - \* (협력이익배분) 대기업 이익 → 중소협력사 공유·출연시 세액공제  
(상생협력기금)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 확대  
(성과공유) 기업이익을 근로자와 공유시 세제 지원 방안 강구  
(상생결제)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 → 중견기업까지 확대
-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
  - \*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,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
-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등

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등 조정기능 강화

■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化 지원 강화

○ 네트워크형 정책금융지원프로그램 도입등 중소·중견기업 협업화 촉진 (17.10월, 금융위·기재부·산업부)

○ 중소기업간 협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발굴·개선 (17.12월, 중기부)

\*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배제 등

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

○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(3년) 연장

○ 중소·벤처기업 해외직접판매 촉진,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등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강화



## ■ 대통령 직속 '4차 산업혁명위원회' 신설 (17.8월)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 (17년 3/4분기)

- 혁신적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초지능·초연결 기반 구축
  - \* 핵심기술·R&D 인재양성 집중투자, 5G·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
-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, 제조-ICT-서비스 융합, 리쇼어링 등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
  - \*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 수립 (17년), 핀테크·공유경제 등 고부가융복합 신서비스 집중 육성 (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마련)
  -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,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 등
  - 자율주행차, 정밀의료, 드론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, R&D 예산, 세제, 데이터, 인력 등 집중 지원

## ■ 보호무역주의, NEXT CHINA 대비 새정부 통상전략 수립 (17.9월, 산업부·기재부·외교부)

## ■ 중소·중견기업 수출 비중 40% 이상 확대 및 청년 해외 진출 촉진

## 5 리스크관리 및 정책인프라 혁신 등

### 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별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

- 지역별 시장상황(과열·위축)에 따라 규제 및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 (17.7월 주택법 개정, 국토부)

### ■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업·기업 구조조정 추진 (기재부·산업부·국토부·해수부·금융위)

- 부실징후기업 신속정리 및 산업차원의 경쟁력 제고 병행 (건설업, '17.12월)
  - \*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신속추진, 조선밀집지역 지역경제 위축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
- 산업재편기업 인센티브 강화, 매년 50개 기업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추진
  - \* 기업활력법 성과점검을 통해 자금 지원 프로그램 확충, R&D 지원 실효성 제고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(17.11월)

## 5 리스크관리 및 정책인프라 혁신 등

### ■ 향후 5년간 지출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

- OECD 최저인재정의분배개선율(15년 13.5%)을 10%대→20%대로 제고하고, 재정의분배개선 효과분석추진  
(17.12월~, 기재부)

### ■ 일자리 창출·소득분배에 역점을 둔 조세정책 재설계

-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, 고소득·고액자산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 
\* '17년 중 조세·재정 개혁 특별기구 설치

### 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반영\*, 종합심사낙찰제 고용관련 가점 2배 상향(0.4점→0.8점)

\*예) 임금적기 지급, 정규직 채용 실적, 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,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